

민주통합 도입 '모바일+현장투표' 문제점 산적

고령층·농어촌 소외, 동원선거 우려

가입자 주소지 확인 안돼 지역 경선 적용 불가능

조직력 앞세운 현역 유리… 대리투표 가능성도

민주통합당이 6일 최고위원회와 당무위원회에서 지역구 후보 선출을 위한 국민경선은 전화와 인터넷 등으로 사전에 모집한 선거인단의 현장투표와 모바일 투표 결과를 합산하는 방식으로 치르기로 결정함에 따라 각 종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민주당은 이날 총선 지역구 후보 선출을 위한 국민경선은 전화와 인터넷 등으로 사전에 모집한 선거인단의 현장투표와 모바일 투표 결과를 합산하는 방식으로 치르기로 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현장투표는 모바일 투표는 투표방법 별로 가중치를 부여하지 아니하고 1인 1표로 단순 합산하기로 했다.

현장 투표는 터치스크린 투표 방식으로 하고 모바일 투표는 자동응답 기능으로 첫째 날 3회, 둘째 날 2회 기회를 주게 된다.

이처럼 모바일 경선을 도입하기로 한 것은 공천권을 국민에게 돌려주겠다는 차원에서 돈 선거와 조직 선거의 폐해를 막기 위한 방법으로 해석된다.

그럼에도, 여전히 현장투표는 동원 선거의 폐해, 모바일 투표는 노장년 층과 농어촌의 소외를 부를 수 있다는 점이 가장 우려되는 부분으로 지적되고 있다.

현장투표의 경우 조직력이 우세한 현역의원의 압도적 우위가 점쳐진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금품이 오갈 경우 경선 이후 후유증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모바일 투표라고 해서 조직력의 영향이 없는 것은 아니다. 모바일 선거인단 규모도 조직의 힘에 따라 좌우될 소지가 많기 때문이다. 하지만, 민주당에서는 다수가 선거인단에 가입하면 동원의 의미가 없다고 보고 있다. 조직의 지지가 표심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다.

그럼에도, 민주당은 만약 모집 선거인단 수가 지역구 유권자의 2%에 미달하면 여론조사도 병행 실시키로 했다. 동원경선 폐해를 막기 위한 것이다. 이 경우 현장투표와 모바일 투표를 70%, 여론조사를 30%씩 반영해 후보를 선출하게 된다.

문제는 민주당의 의지대로 모바일 투표의 도입이 가능하나는 것, 현행 공직선거법으로는 선거인단 신청자의 주거지를 확인할 수 없는 만큼 합법적으로 모바일 투표를 할 수 없다. 현행 법상으로는 가입자의 주소지를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전국

적 선거가 아닌 지역 선거에서는 모바일 투표의 적용이 불가능한 것이다.

새누리당의 협조를 얻어 2월 임시국회에서 관련 법을 개정, 모바일 투표를 도입하겠다로 문제점은 산적해 있다.

전남과 같이 농어촌 인구와 노장년층이 많은 지역은 경선에서 소외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즉, 청년층과 도시민의 표심에 경선 결과가 좌우됨에 따라 표심의 왜곡 현상이 나타날 수 있는 것이다.

이 이에도 공개투표 또는 대리투표의 우려도 상당하다. 이는 비밀·평등 투표라는 헌법조항을 위배하는 사안이기도 하다.

전남지역의 한 총선 예비후보는 "모바일 투표를 시행하다가 대리투표가 단 한 건이라도 적발되면 경선 불복과 법적 소송이라는 후유증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당 지도부가 충분한 검토를 통해 폐해를 막을 방법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민주통합당 한명숙 대표와 강철규 공천심사위원장 등 공심위원들이 6일 국회 대표실에서 열린 첫 번째 공심위원회에서 손을 잡고 취재진에게 포즈를 취하고 있다.

연합뉴스

민주, 예비후보들에게 던져진 세 가지 논술시험

- ① 젊은이들에 꿈과 희망 심어 줄 방안은
- ② 이시대 99% 서민의 아픔 해결책 뭔가
- ③ 경제가치와 사람 가치 충돌땐 어떤 선택

민주통합당은 6일 4·11 총선 지역구 후보자 공천을 위한 심사에 본격 착수했다.

특히, 강철규 공심위(공천심사위원회) 위원장은 모든 후보자에게 세 가지 질문을 주고 A4 용지로 답변을 받겠다고 밝혀 주목을 끌었다.

민주통합당은 이날 오후 강철규 위원장 주재로 첫 공천심사위원회 회의를 열고 공천 심사 기준 및 향후 일정 등을 논의했다.

공심위는 이번 주 내에 구체적인 심사 방법을 결정하기로 했으며 오는 9~11일 후보자 공모를 거쳐 13일부터 공천심사를 시작할 계획이다. 강 위원장은 회의가 끝난 직후 기자회견을 갖고 공천 심사와 관련, "첫째는 심부름을 하려 온 것이 아니라는 생각으로 임하고, 둘째는 정의의 여신 디케가 되겠으며 셋째는 시대정신을 담아 내겠다"고 강조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특히, 강 위원장은 모든 예비 후보에게 세 가지 질문을 던져 답변을 받겠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강 위원장은 세 가지 질문으로 ▲ 우리의 미래인 젊은이들에게 희망과 꿈을 찾아줄 실현 가능한 방안은 무엇인가 ▲이 시대 99% 서민의 아픔을 정책적·제도적으로 해결할 방안은 무엇인가 ▲경제의 가치와 사람의 가치가 충돌하면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등을 제시했다.

세 가지 질문에 대한 답변이 별별 력을 가질 수 있느냐는 질문에 강 위원장은 "이 시대의 아픈 서민의 문제를 고민하고, 국민과 함께 어떤 생각과 고민을 하는지에 대해 심사위원들이 깊이 있게 논의할 생각"이라고 답했다.

"공천 탈락땐 불출마"

새누리, 자필서약 받아

새누리당(옛 한나라당) 공직후보자추천위원회가 6일 4·11 총선 공천 신청 접수를 시작하면서 신청자들로부터 공천 탈락 때 승복하겠다는 자필서약을 받고 있다.

과거 공천신청 때에도 '당의 결정에 절대 승복한다'는 내용의 서명을 받았지만, 이번에는 '본인이 낙천할 경우 행보를 포함해 본인의 각오를 자필로 적어달라'는 칸이 서약서 하단에 추가됐다.

자필 서약은 법적 구속력이 없더라도 낙천자가 공천에 불복해 다른 당 후보나 무소속으로 출마하지 못하도록 하는 심리적인 압박 효과를 노린 것이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2012년 낙선운동 시작됐다

참여연대 등 1000여개 단체 9일 총선네트워크 출범

민주노총,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민주언론시민연합 등이다.

광주·전남에서도 우선 지역단위 단체별로 참가할 계획이며, 총선과 대선에 대응해 광주지역 60여 개 시 민사회단체와 시민이 참여해 만든 '체인지(Change) 2012 총선·대선 광주연대'도 동참 여부를 논의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반값 등록금과 한국판 베핏 세, 무상의료 등의 공약 체택률 4·11 총선 후보들에게 다양한 방식으로 촉구할 계획이다. 아울러 유권자들에게 투표 참여를 독려하는 유권자 운동도

적극적으로 전개한다. 이들은 '리멤버 뱃'(Remember Them, 그들을 기억하라)이라는 이름의 사이트를 통해 자신들이 요구한 의제에 반대의사를 밝힌 의원들에 관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올리기로 했다.

또 이 사이트를 트위터, 페이스북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와 연동해 과거 총선시민연대가 벌었던 낙선운동과 비슷한 효과를 낸다는 구상이다.

한편, 총선유권자네트워크는 9일 오전 10시30분 태평로 프레스센터에서 대표자회의를 연 뒤 11시30분 출범식을 통해 활동 개시를 선언할 예정이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백혜련〉

〈승호창〉

해 정부 정책을 논리적으로 반박하면서 '촛불 변호사'란 별명을 얻었다.

백 전 겸사는 이날 "정치개혁과 새로운 변화를 위해 시민의 목소리를 대변하겠다"며 "아권의 힘을 모아 낸 새누리당 후보를 이기겠다"고 밝혔다.

그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사무처장과 국가인권위원회 정책자문위원을 역임했으며 지난해 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박원순 후보의 대변인을 맡은 바 있다. 그는 특히 2008년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시위 당시 TV토론에 출연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2012년 낙선운동 시작됐다

- 김종우



Le 쿠스쿠스 패밀리 레스토랑

종이 울리면 따뜻한 음식이 나옵니다.
당신께 드리는 맛의 사치

2012년 CUSCUS ART HOUSE

CusCus Family Restaurant

쿠스쿠스 패밀리 레스토랑

광주 수완점 062 371-0011	광주 신세계점 062 360-1981	광주 상무점 OPEN 예정
------------------------	-------------------------	-------------------

쿠스쿠스: 광주 수완점
체인점 문의: 062 371-0011
체인점 지역: 대전, 전북, 전남, 광주